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이홍섭 (국방대학교 교수)

2009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러·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는 지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발효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대 중국 무기수출제재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서방국가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러·중 양국은 일련의 주요 국제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거나 접근된 입장을 보였고, 유엔 등 다자 기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 또한, 양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국제 테러리즘의 분쇄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반테러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SCO의 '평화사명' 연합군사훈련은 지금까지 4회 실시되었다.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은 인적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군수·방산협력분야를 넘어 작전·운영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군사협력관계가 심화되자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양국이 동맹이 되었을 때 전개될 국제관계의 양극화, 국제적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진전시킬 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는 상황이 한국에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의 MD체제 구축과 러·중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고착화될 수도 있는 '미·일vs.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극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러·중 군사협력의 배경
 - 가. 미국·EU의 무기금수 조치 및 중국의 현대 기술 중요성 인식
 - 나. 국방예산의 증가
 - 다. 중국의 장기적인 군수산업 육성책
2. 러·중 군사협력의 원인
 - 가. 중국군 현대화
 - 나. 러시아의 경제, 외교적 필요성
 - 다. 국제정치 환경
3.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
 - 가. 군사협력의 형태별 특징
 - 나. 러·중 군사협력의 경향 및 전개
 - 다. SCO를 통한 협력
 - 라. 러·중 군사협력의 확대: 불가피한 협력?
4. 러·중 군사협력의 효과 및 한계
 - 가. 효과
 - 나. 한계
5. 결론: 평가 및 제언

1. 러·중 군사협력의 배경

가. 미국·EU의 무기금수 조치 및 중국의 현대기술 중요성 인식

- 미국과 EU는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됨.¹⁾
 - 엠바고를 해제하더라도 인권탄압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하는 EU의 무기 수출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중국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다짐.
- 현대기술의 중요성 인식
 - 걸프전(1991년 1~2월)은 국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와 장비의 총체적 과학기술 수준의 중요성을 보여준 전쟁. 중국은 무기와 장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
 - 미국의 첨단군사력을 보여준 걸프전은 중국이 주장하는 ‘종합국력’의²⁾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군사초강대국으로 남게 될 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대러 협력강화의 촉매제가 됨.

나. 국방예산의 증가

-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증가로 1990년대 러시아의 첨단무기와 군사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음.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하향곡선을 그리던 중국의 국방예산은 강택민이 군을 맡은 이후로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대전환. 1990년 이후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두 자리씩 증가.
- 국방비의 증가는 상당부분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획득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양국 군사협력 확대.

다. 중국의 장기적인 군수산업 육성책

- 중국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대내 군수산업과 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킴으로써 최선의 첨단 군사시설과 무기를 직접 생산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것임.

- 중국의 전략가들은 외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선택적으로 획득하여,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무기생산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
- 중국은 1960년대 초 중소분쟁으로 소련원조의 단절과 약 1,300여명에 달하는 기술자의 퇴진, 그리고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은 무기 생산을 퇴보시킴.

2. 러·중 군사협력의 원인

가. 중국군 현대화

- 무기체계 현대화작업
 - 1978년 이후 등소평이 제기했던 중국의 국정목표인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가운데 하나의 항목으로서 추진됨.
 - 당시 중국의 당·정·군 지도부에서는 이 중에서도 국방현대화를 매우 시급한 문제로 여김.
 -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는 대부분 자체 생산이 가능했지만, 전투기, 잠수함 등 해·공군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생산하기에는 기술 수준이 아직 미약한 상태였음.
 - 중국의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해 더 이상 군사전략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없게 됨.
 - 과거 소련의 원조 하에 무분별하게 군수공장이 설립되었던 군수산업의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최신기술을 수용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곧바로 생산해내는 계획을 추진하기에도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이르러 대외 군사협력을 통한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첨단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미국의 걸프전 수행을 목도한 중국은 군사전략적으로 “첨단기술조건하의 제한국부전쟁전략”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성능을 갖는 첨단무기체계를 요구하게 됨.
 - 군비지출 세계2위 국가(2009년 기준 천억 달러, 1위 미국은 6,610억 달러).
- 중국군 현대화의 의미
 - 전통적인 富國強兵(부국강병) 달성과 미국 수준의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현대화된 군사력 증강.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은 대외 군사협력을
통한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첨단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대외적으로 중국은
군 현대화의 유일한
목표가 국가의
안전 유지와
발전 이익의 보호,
국제적 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역설해 옴**

- 대외적으로 중국은 군 현대화의 유일한 목표가 국가의 안전 유지와 발전 이익의 보호, 국제적 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역설해 옴. 따라서 대만문제 해결에 필요한 군사력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 중국의 기존 주장이었음.
- 그러나 국방 분야 3대 중점사업이 항공모함 건조, 최신형 대함 탄도 미사일 개발, 5세대 스텔스기 개발 이라는 점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짐.
- 중국은 해양대국을 추구하면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고, 항공모함 킬러라는 등평 미사일 시리즈의 실전배치와 자체개발해 시험비행에 성공한 스텔스기 쟈-20은 핵무기를 제외한 최고 군사력의 상징.
- 4대의 조기경보기도 운영 중이며,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전투기 작전 반경을 3천km까지 확대.
- 2007년에는 우주공간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요격하였고 세 번째 베이더우(北斗) 항법위성을 발사해 우주무기 개발의지도 과시함.
- 중국의 이러한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해양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서 일본 오키나와 열도와 베트남 동쪽의 남중국해 일대 까지를 염두에 둔 제1도련(Island Chain)에서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를 포함한 제2도련지역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불가피하게 미중 양국의 방위선을 중첩해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문제 등의 분쟁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음.

나. 러시아의 경제, 외교적 필요성

- 경제회복을 위한 필요성
 - 경제회복에 중요: 러·중간 무역규모는 1990년대 수십억 달러 수준에서 2009년 6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4번째 무역상대.
 - 극동지역개발에 중요한 노동력제공(러시아인들의 지역이탈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메워줌).
 - 소연방 붕괴이후 동유럽(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의 무기조달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군산복합체의 무기 수출에 적신호가 발생하였는데 1989년 198억 달러에서 1991년 66억 달러로 축소됨.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외 무기 수출은 중국 및 인도에 집중됨(70%).
- 러시아 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영향력 제고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연이어 켈리핵명이

발생하자 위기감을 공유하게 됨.

다. 국제정치 환경

○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세계패권을 주도하려는 미국을 일차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에 기초한 정책이 자국 세력권을 제한한다는 인식하에 공동으로 대응.
- 1989년에 발발했던 천안문사태는 미국과 서구국가들이 중국을 고립시키도록 만드는 결과 초래함.
- 러·중 관계 개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모습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진 러·중의 동류의식에 기반한 것임.
- 영토 내 분리주의 문제(러시아의 체첸, 중국의 티베트 및 신강 등)와 국경주변 비우호적 동맹세력 강화저지(러시아의 경우 NATO, 중국의 경우 미일 방위협력)라는 영역에서 양국은 동변상련의 우의를 다져옴.
-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적어도 두 차례 국제적으로 러·중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돌발변수가 있었음(1999년 NATO의 코소보공습,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개전).
- 러·중 전략적 협력이 지향하는 목표는 유라시아에서의 지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달성하며, 적극적으로는 범세계적 다극질서를 달성하는데 있음.
- 러시아는 NATO의 확대와 ‘Partnership for Peace’³⁾ 계획의 진행으로 서방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옴.

러시아 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영향력 제고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연이어 컬러혁명이 발생하자 위기감을 공유하게 됨

3.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

가. 군사협력의 형태별 특징

○ 군사협력의 과정

- 인사교류.
- 군수, 방산분야 (무기와 기술이전).
- 작전, 운영분야.
- 동맹.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의 쟁점은
양국 간의 국경선
협정문제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 무기이전,
그리고 군수방산분야
협력이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됨**

○ 군사협력의 형태

구분요소 협력형태	조약(의무) 관계	공동의 위협	협력의 수준(강도)
군사동맹	유	유	강함
군사협조	무	유	보통
군사교류	무	무	약함

○ 군사협력 형태별 협력내용

군사협력 형태	협력분야	협력내용
군사동맹	군사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 협의기구 운용 ▪ 군사력 주둔, 군사정보교환, 공동위기 관리 ▪ 연합군사훈련, 군사작전, 교리공동연구
군사협조	군사경제/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분담, 군사차관 공여, GNP/군사비 협상 ▪ 군사원조, 군사무역(무기이전) ▪ 군사과학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 방산협력
군사교류	기능적 상호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상호방문, 무관교환 ▪ 군사교육훈련 교류, 군사훈련 참관 ▪ 군사사절단 교환방문, 국제군사 문화 활동

나. 러·중 군사협력의 경향 및 전개

○ 러·중 군사협력의 경향

-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의 쟁점은 양국 간의 국경선 협정문제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 무기이전, 그리고 군수방산분야 협력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됨.
- 무기이전이란 전쟁무기, 그 부품, 탄약, 지원 장비, 기타 군사목적의 상품들을 포함하는 재래식 무기의 공여, 신용, 바터 혹은 현금거래에 의한 국제적 이전을 의미함. 양국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무기이전이라는 것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러·중 군사협력의 전개

-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동단 국경에 대해서만 합의.

-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 짐.
 - 1992년 중소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적 관계’ 수립.
 - 1994년 강택민의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관계는 ‘건설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1996년 옌친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 1996년 상하이 회의 개최(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 설립으로 발전.
 - 2001년 7월 16일 강택민-푸틴, ‘러·중 상호우호협력조약’ 체결.
 - 2006년에는 ‘중국의 해’, 2007년에는 ‘러시아의 해’를 상대국에서 시행.
 - 2009년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중, 러, 인도, 브라질 4개국이 참가한 제1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향후 매년 돌아가면서 정상회의 개최.
 -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추진, 유엔개혁문제에 있어서 러·중의 입장과 시각은 일치.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러·중은 모두 다자회담의 대화 방식과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음. 러·중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음.
 - 현재 양국 국가원수는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상호방문, 정부수뇌 사이에도 정기적인 협상. 메드베제프는 취임 후 첫 해외방문국(CIS 제외)으로 중국을 선택.
- 1996년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한 이후 양국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동맹관계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이에 대해 서방 분석가들은 이것이 대서방 및 NATO를 견제할 목적은 아닌지 의심함.
- 러·중 군사협력 강화
-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25차례의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힘(2009.4).
 - 군사기술협력양자위원회 개최(2008.12, 2009.11).
- 인사교류
- 1989년 5월 16일 중소 정상회담 이후, 소련은 중국 인민해방군 인사

**유엔개혁문제에 있어서
러·중의 입장과 시각은
일치하고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러·중은 모두
다자회담의 대화 방식과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음**

*SCO는 중국에게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고
러시아에게는 구소련
지역에서 영향력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를 초청하여 자신들의 군사훈련 참관하도록 제의.

- 1989년 11월 중국의 군사파견단이 국경주둔 병력감축에 대한 토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
- 이후 양국은 군 인사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신뢰구축방안(CBM)이 논의됨.
- 1990년 6월 블라디미르 쿠즈코프(Vladimir Khuzhkov) 해군소장을 대표로 하는 소련의 군사방문단이 거의 30년 만에 북경 방문.

다. SCO를 통한 협력

○ 일반성격

- 중국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SCO 창설멤버(1996년). SCO는 단순한 지역 협력기구 수준을 넘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맞서는 준군사동맹체로 부상하고 있음. 핵 문제로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도 SCO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 냉전시절 공산권 양대 세력이던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분쟁을 해결한 뒤 2005년 첫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해 옴.
- 중국에게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고 러시아에게는 구소련지역에서 영향력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
- 러시아는 SCO를 NATO에 대응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체기구로서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응하며 경제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SCO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중 경쟁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
- 러시아의 입장에서 SCO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 이에 러시아는 인도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SCO 내의 대 중국 균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라시아 내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⁴⁾ 강화를 통해 대미 전략적 균형은 물론 대중견제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위한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연합군사훈련

- 2005년부터 시작된 평화사명 연합훈련은 2007년, 2009년, 2010년 4

차례 실시됨.

- “평화사명-2009” 연합군사훈련은 중국 심양군구 조남연합전술훈련 센터에서 실시 됨. 실전연습에서 러·중 양국 군대는 2,600명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탱크, 자주포 등 각종 장갑무장차량 백여 대와 전투폭격기, 공격기 등 각종 비행기 60여대를 동원하여 “연합통제, 입체돌파, 기동저항, 반격·심층섬멸” 4가지 내용을 연습함.
-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마효천 상장과 러시아연합육군 부총사령관 스투제니킨 중장, 상해협력기구 성원국 고위급 군사대표단 성원 및 상해협력기구 사무처 사무총장, 지역 반테러기구 주임 등이 현장에서 연습을 참관.
- 2010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평화사명-2010” 연합반테러군사훈련을 가짐.

라. 러·중 군사협력의 확대: 불가피한 협력?

○ 러시아의 대중 위협인식

- 중국의 성장이 러시아에게 위협되는가? 예(44%), 아니오(39%) (2009. 10. 여론조사).
-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GDP 규모가 중국의 25~30% 수준임(중국: 4조 9,850억 달러, 러시아: 1조 2,290억 달러).
- 인구규모에서도 중국과 큰 격차.

중국의 외교관계 지수

조사일: 2008초

중-러관계	중-불 관계	중-인도 관계	중-미 관계
8**	6.3	5.4	1.1

* 우호적(3~9), 비적대적 비우호적(-3~3), 적대적(-9~-3),

** 2005년: 5.5

출처: 清華大學 국제문제연구소

러시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강화를 통해 대미 전략적 균형을 물론 대중견제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위한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러시아는 중국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늘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최신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거래와 이전을 꺼리면서
기술적인 갭을 유지함

4. 러·중 군사협력의 효과 및 한계

가. 효과

-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에게 1) 對 미(EU) 외교력 배가 2) 경제회복 3) 노동력 제공(극동지역).
- 러시아의 무기와 기술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함.
- 러·중의 군사 분야의 합작은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임.
 - 러시아는 중국 첨단무기의 최대 공급 국가이고 쌍방의 군사협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음.
 - 러·중 군부는 상호간의 각종 차원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국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포함되어 있음.
 - 러·중 군사합작은 ‘국제테러리즘, 민족분열주의자, 종교극단주의세력’에게 타격을 가하고 강력한 위협 기능을 하고 있음.

나. 한계

- 러시아의 입장
 - 러시아 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러·중 우호관계를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 즉 러시아의 일부 엘리트들은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국력신장에 위기감.
 - 에너지 분야 등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이 과도하게 커짐에 대하여 우려.
 - 중국의 군현대화가 러시아에게는 양날의 검. 러시아는 중국에게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도 늘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최신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거래와 이전을 꺼리면서 기술적인 갭을 유지함.
 - 러시아는 미국과의 군축협정에 따라 핵무기비축을 줄이는데 비해 중국은 핵무기 비축확대.
 - 양국의 군사협력이 인사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이전에 해당되는 군수방산협력분야로 발전했으며, 또한 최근 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작전·운영 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졌지만 향후 양국의 관계는 결코 과거의 동맹체제로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임.

○ 중국의 입장

- 중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비동맹정책’은 복잡다단한 국제투쟁 속에서 중국이 주축이 될 수 있게 해 주었고, 평화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국제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음.
- ‘비동맹정책’을 버리면 중국의 평화적 발전이란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의 강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동맹결성의 길로 달리는 것은 일부 주권을 양도해야 하거나 일정정도로 자신의 손발을 묶게 될 수도 있고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될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음.
- ‘비동맹정책’을 계속 견지하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더욱 광범위하게 단결하고 중흥무진으로 국제관계 전략을 진행하는 데도 유리함.

○ 미국의 입장

- 미국은 SCO를 반서방클럽으로 간주하면서 2005년부터 실시된 SCO의 ‘평화사명’ 훈련을 통한 러·중 연합훈련을 유라시아의 세력판도를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주시.
- 러·중 군사협력이 미국의 압도적 우위까지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동북아, 넓게는 유라시아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인식.
- 러·중이 함께 중앙아시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주목.

5. 결론: 평가 및 제언

-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는 대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체계와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음(2005~2009: 89%). 특히 해군과 공군에 도입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구축함 등은 인민해방군의 기동력과 해상전투력의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중국-러시아의 군사밀월은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분석됨. 즉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망(MD)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밝히자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함께 미국에 맞서려는 3각 전략 구도를 확정한 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함. 중국 역시 태평양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구함.
- 오랜 세월동안 서로 등을 돌리던 양 국가가 무기와 기술이전이라는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망(MD)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밝히자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함께 미국에
맞서려는 3각 전략 구도를
확정한 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함*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서구의 금수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까닭에, 당분간은
러시아를 통해
첨단 군사장비와
기술획득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먼저 대내적으로는 중국 방위산업의 한계, 그리고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요구 등을 손꼽을 수 있음. 대외적 요인으로는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국제적 안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위협요인의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즉 미국이라는 패권주의의 등장과 천안문사태라는 국내변수가 불러온 국제적 영향 요인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결속을 불러옴.

- 그런데 무기체계를 판매하는 것은 바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도 늘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최신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거래와 이전을 꺼리면서 기술적인 갭을 유지함.
- 러시아의 목적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 것이고 중국의 목적은 오직 자국의 군비증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의 처지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양쪽은 충분히 각자의 몫을 챙기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요컨대 양국의 군사협력이 인사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이전에 해당되는 군수·방산협력 분야로 발전했으며, 또한 최근 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작전·운영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짐.
-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중이 함께하지는 않을 것, 즉 양국관계가 동맹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아르바토프 같은 학자는 미국에 대한 공유되고 있는 견해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은 낮으며, 러시아는 그런 상황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트레닌도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중국을 잠재적인 군사 동맹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도 대단히 상업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함.
- 중국은 향후 도광양晦(韜光養晦 有所作爲)의 기조아래 지속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추구할 것임. 아직은 천안문사태 이후 서구의 금수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까닭에, 당분간은 러시아를 통해 첨단 군사장비와 기술획득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 만일 금수도치가 해제된다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서구 선진국으로 시야를 넓혀 군사장비의 획득노선을 다변화시킬 것이 분명함.

- 러·중 동맹 결성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양극적 세계 판세를 초래하여 세계평화 및 안정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런 양극적 판세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몇 개, 혹은 몇 십 개의 중소 국가를 다시 끌어들이더라도 겨우 허약한 한 극을 만들 수 있을 뿐임. 그러나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미일동맹 등 동맹관계에 의지하여 상대적으로 강대한 한 극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국가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정치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것이며, 상하이협력기구도 군사정치집단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의 태도
 - 러·중은 미일동맹의 MD체제를 군사패권주의의 강화 시도로 해석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함.
 -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따른 미일동맹 강화와 2010년 천안함 사태는 동북아에서 미·일과 러·중의 갈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2005년 반기문 외무장관은 SCO 연합군사훈련이 특정한 제 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역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평가를 내린바 있음. 이는 적절한 평가로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다극화 추세를 활용해야 함.
 -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면 한국에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시각에서 한국은 ‘미·일 vs. 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극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면 한국에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시각에서 한국은
‘미·일 vs. 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극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자료】

〈표 1〉 주요 재래식 무기 5대 공급국, 2005-2009⁵⁾

공급국가	세계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요 수입국 (공급자의 전체 무기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	30	한국(14%) 이스라엘(11%) UAE(11%)
러시아	23	중국(35%) 인도(24%) 알제리(11%)
독일	11	터키(14%) 그리스(13%) 남아프리카공화국(12%)
프랑스	8	UAE(25%) 싱가포르(21%) 그리스(12%)
영국	4	USA(23%) 인도(15%) 사우디아라비아(10%)

출처: SIPRI Yearbook 2010

〈표 2〉 주요 재래식 무기 5대 수입국, 2005-2009

수입국	세계무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요 공급국(비중)
중국	9	러시아(89%)
인도	7	러시아(77%)
한국	6	미국(66%)
UAE	6	미국(60%)
그리스	4	독일(35%)

출처: SIPRI Yearbook 2010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이흥섭

現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안보정책) 교수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주요 경력으로는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했음. 연구 분야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안보문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러시아의 안보전략 변화,” “러시아 협상행태의 지속성과 변화” 외 다수가 있음.

주석

- 1) 2005년부터 해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앞으로 EU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음. 이미 일부 국가들(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은 방위위주 무기를 수출, 확대하고 있음.
- 2)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부문은 다음의 9가지, 즉 영토 및 천연자원, 인구, 경제, 군사, 과학기술, 사회발전, 발전의 지속성, 국내정치, 국제공헌 등이다. 이것에 따라 종합국력의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인도, 이태리, 브라질 순으로 중국은 세계 7위에 불과하다
- 3) NATO의 프로그램으로서 NATO와 유럽의 기타국가(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구소련국가들과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함.
- 4) 2002년 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6개국으로 창설되었고, 이후 2006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함.
- 5)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전체 국제거래의 76% 차지. 2005~2009 연간 주요 재래무기 국제거래는 2000~2004 연간평균보다 22% 상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